

‘민(民)’이라는 판도라의 상자

백영서 지음, 『중국현대사를 만든 세 가지 사건: 1919·1949·1989』(창비, 2021)을 읽고

조문영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I. ‘100년의 변혁’으로 읽는 중국현대사

이 책은 현대중국의 지난 100년을 헌정의제의 역사, 다시 말해 민의 정치참여 확대와 국가의 권한 및 정통성 제고라는 두 요구를 함께 충족시키고자 한 움직임의 연속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전환점이 두드러진 세 사건으로서, 저자는 1919년 5·4운동,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989년 톈안먼사건에 주목한다. ‘민(民)’은 이 세 사건을 추동한 역사 주체로 등장한다. 1919년을 ‘신청년과 각계 민중연합의 시대’, 1949년을 ‘당과 인민의 시대’, 1989년을 ‘군중자치의 순간’으로 명명한 데서 보듯, ‘민의 결집과 자치의 경험’은 세 사건을 관통하는 주제다. 저자는 ‘운동’, ‘국민국가 형성’, ‘개인’이라는 세 초점을 장착한 렌즈로 이 경험을 투시하면서 지난 100년 변혁의 역동과 근경을 추적한다. (저자와 한국 지식인 사회가 착목해 온)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¹의 수행 주체로서 국가뿐 아니라 민의 역할을 중시하고, 국민국가가 갖는 해방과 억압의 양면성에 주목하며, 자유주의적 개인의 가정에서 벗어나 개인수양과 사회변혁이 결합한 흐름을 훑아보겠다는 기획을 다초점렌즈를 통해 수행했다. 저자가 “집요저음(basso ostinato)”에 비유한 ‘공화의 확충적 실질화’ 지향이 이 기획 저변의 선율로 반복되는데, 이때

¹ 이남주(2009) 참조. 이중과제에 관해서는 필자의 이해가 짧아 본 서평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을 것이다.

‘공화(共和)’란 선거를 통한 의사결정과 제도화된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 일상적인 공적 참여를 포괄한다.

이러한 접근을 거쳐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국인들이 장기적인 헌정의제에 부응해온 역사는 결코 단선적이지 않으며, 이 의제를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노력은 (단절을 포함한) 나선형의 형태로 전개됐다. 중국 현대사를 생산력 발전과 산업화의 진전으로 보는 ‘현대 중국’ 담론, 중국공산당의 반제·반봉건 투쟁 과정으로 보는 ‘혁명 중국’ 담론 양자에 갖든 목적론적 서사에 대한 거부가 담겨 있다. 이 주장은 (저자의 사유의 틀로 자리 잡힌) 이중과제로서의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이 단순히 절충적이거나 선후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부단한 긴장 관계를 보여 왔다는 인식에 조응한다. 저자의 두 번째 주장은 ‘국가-사회 관계’의 복잡성에 관한 여러 학자의 논의와 교차하는 것으로, 지난 100년간 민의 결집과 자치의 역사가 운동과 제도, 계량(개혁)과 혁명이 (이분화되기보다) 착종된 상태로, 시기마다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었다는 점이다. 당국(黨國) 체제의 위상과 역할에 과도한 무게를 두기보다 당과 인민의 상호관계와 역동에 주목함으로써, 저자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갈등 흐름 속에서 더 강력해진 중국특수론(예외론)과 거리를 둔다.

본 필자는 위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며, 무엇보다 현대중국사를 근대주의도 혁명사관도 아닌 “100년의 변혁”으로 해석해내기 위해 저자가 세 가지 사건을 배치한 방식의 정교함, 그리고 저자가 대화자로 삼은 자료의 다양성과 방대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역사학을 위시한 인문학, 지역학으로서의 중국학, 기타 사회과학에서의 국내외 연구성과와 톈안먼사건에 관한 예술작품까지, 이질적인 자료들을 일관된 주제 아래 직조하면서民国시기부터 현재까지 긴 역사의 흐름을 소묘하는 작업은 녹록치 않았을 터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사건의 순간을 생생히 재현하는 방식으로 서문을 열고, 사건의 배경과 전개를 민의 결집과 자치란 주제를 중심으로 쟁점화하고, 타 연구자들의 해석과 경합하면서 쟁점을 제공하고, 동시기 동아시아 정세와 사건에 대한 동아시아인의 해석을 각 장 끝에 배치에 세 사건의 세계사적 의미를 재고하는 구성 또한 주목할 만하다. 오래전 5·4운동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면서 공론장으로서 톈안먼(天安門)이 갖는 상징성에 주목했고, 1990년대부터 ‘동아시아’를 개념이자 실천 과제

로 제안했고, 최근까지 ‘사회인문학’이라는 기치 아래 여러 협업을 주도하면서 인문학의 사회성과 사회의 인문성을 동시에 도모했던,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하게 뻗어 나간 저자의 독특한 횡단성 덕택에 가능했던 성과다.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첫째, 그간의 이력이 보여 준 횡단성을 저자가 더 적극적으로 발현할 여지는 없었을까? 동아시아 담론에 대한 오랜 천착을 통해 국가주의적 사고를 극복하고자 했던 전작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묻다』와 비교했을 때, 본 저서는 중국의 국민국가로서의 위상 — ‘하나의 중국’이라는 신화 — 에 근본적으로 도전하지 않는다. 텐안먼의 상징성에 대한 오랜 관심으로 소환된 핵심 사건 — 5·4운동, 신중국 성립, 텐안먼사건 — 은 텐안먼 광장과 수도 베이징, 일부 도시 지역에서 펼쳐진다. 중국사의 유동적인 경계를 문제 삼기보다 국가중심성을 합법화하는 이 장소들은 저자가 일찍이 대만이나 오키나와에 주목하면서 제안했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곳”으로서의 ‘핵심현장’과 거리가 있다.² ‘핵심현장’과 더불어 국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안되었던 ‘복합국가’ 개념 역시 중국의 지난 100년을 해석하기 위한 자원으로 재등장하지 않고 있다. 저서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북토크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훈 역시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역사학자”이자 동시에 “동아시아 담론의 주요 논자”이기도 한 저자가 “복합국가론”의 상상을 이 책을 통해 중국현대사에 대한 대안적 재구성에 투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까지 확장하지는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³

인류학자인 필자가 본 서평에서 좀 더 천착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질문이다. 저자의 학문 이력에서 돋보이는 실천적 접근이 (이 책의 중심 주제인) ‘민(民)’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² 저자는 ‘이중적 주변의 시각’, 다시 말해 “서구중심의 세계사 전개에서 비주체화의 길을 강요당한 동아시아라는 주변의 눈과 동아시아 내부의 위계질서에서 억눌린 주변의 눈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동아시아 역사와 현실의 분석에 긴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대만과 오키나와는 이 이중적 주변의 시각을 버릴 수 있는 핵심현장의 일례로 등장한다. 백영서(2013: 16-17) 참조.

³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주최 『중국현대사를 만든 세 가지 사건: 1919·1949·1989』 북 콘서트 (2021년 2월 24일).

II. ‘민’은 누구이며 어떻게 출현하는가?

빈곤을 주로 연구해 온 필자가 경험한 곤혹스러움은 연구대상으로서 ‘빈민(the poor)’을 획정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빈민에 대한 논의가 생성되는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의 집단으로 구분된 다음의 일이다.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 내부의 고유한 특성을 식별하고, 이 집단에 대해 사유하고 개입할 수 있는 진리를 생산, 유통, 조직하는 작업은 빈곤 정책 담당자뿐 아니라 빈곤에 맞서 싸우는 활동가에게도 중요한 과제다. 다시 말해 빈민은 단순히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발견되며, 심지어 발명된다. 누가, 어떤 시기에, 어떤 이유로, 어떤 대상을, 어떻게 특정한 집단으로 출현시켰는가를 질문하는 푸코(Michel Foucault)의 계보학적 접근은 우리가 구성해 온 앎과 지식, 과학의 체계가 반론 불가능한 ‘진실’이 아니라 일련의 작동들의 최종 산물임을 고려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든 외 편, 2014[1991]; Rose, 1990).

관련해서, 중국 동북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빈곤화 과정과 이를 둘러싼 빈곤 통치에 주목한 필자의 출저를 대화자로 잠시 소개하겠다(Cho, 2013). 2000년대 중반 하얼빈의 한 도시노동자 집단 거주지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필자는 사회주의 중국을 선도하는 중심 계급으로 칭송받았던 도시 노동자들이 개혁개방 이후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로 전락했을 때 이들이 빈곤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빈곤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탐색했다. 조사 과정에서 필자의 머리를 계속 맴돈 것은 결국 ‘인민(人民)’이라는 두 글자였다. 필자가 만난 노동자들은 사회주의라는 타이틀을 버리지 않은 당-국가와 대면하기 위해 ‘인민’의 유령을 불러내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인민’, ‘인민을 위한 복무’와 같이 당-국가가 한때 이들을 호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언어들, 그리고 그 언어들에 수반되는 아우라를 불러냄으로써 보호와 인정을 획득하고자 했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세계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과연 ‘인민’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인민’이라는 기표가 한때 신중국의 이데올로기로 고착되었다 해도 이후 그 의미와 사용법은 가변적이어서 ‘인민’에 속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 공화국의 ‘인민’이 될 자격이 있는가에 관한 질문들을 새롭게 제기했다. 빈곤에 대한

국가의 통치는 ‘인민’을 둘러싼 역사적 긴장과 갈등으로 인해 모순적인 결과들을 생산해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빈곤을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료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을 통치할 새로운 논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층 간부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놓고 노동자들과 갈등하는 지점에서, 그리고 간부들이 상이한 역사를 가진 빈민 집단(도시노동자와 농민공)을 분리해 내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인민’이 갖는 지위와 권리, 책임을 둘러싼 경합이었다.

‘민(民)’에 대해서도 유사한 질문이 솟구친다. ‘민’은 과연 누구이며 어떻게 출현하는가? 1919년 5·4운동,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989년에 톈안먼사건 당시 광장에 운집했거나 사건에 연루된 다양한 사람들을 누가 ‘민’으로 호명해냈는가? 일차적으로 저자 자신이다. 저자는 ‘민’을 “세 사건을 추동한 역사 주체”로 명명하면서, “100년의 변천 과정에 따라 이들은 민중·인민·군중 등으로 달리 불렸”(22쪽)다고 설명한다. 이 서술과 각주에 보충한 민중, 공농대중, 공농민중, 군중, 공민 등 개념의 계보에 관한 짙막한 언급으로 보건대, 저자 역시 ‘민’이 자연 상태의 무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태동한 역사적 기표임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호명을 아우르는 우산 같은 용어로 ‘민’을 사용한다.”(22쪽)라고 밝히면서 각 사건에서 민의 결집과 자치의 경험을 보겠다고 공표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모두 ‘민’의 개별 형상으로 등장하면서 이들 안에서 ‘민’을 발견하는 집단과 ‘민’으로 호명되는 집단 사이의 긴장을 포착하는 작업이 모호해졌다. 가령 1919년을 다룬 1부의 서술에서, 저자는 민의 자치와 결집의 실례로 5·4기에 탄생한 ‘신청년’과 각종 사회단체의 움직임, 학생과 노동자, 상인의 대규모 연대투쟁을 소개한다. 특히 학생사회의 정치적 결집과 조직화를 자세히 다루는데, 1910~1920년대 학생이 변혁 주체인 ‘신청년’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일상생활의 경험세계”와 “정치적 결집의 경험세계”의 접목으로 파악하고, 노동자와 연결되고 생활공동체를 조직하면서 ‘사회변혁적 자아’가 출현하는 양상을 깊이 있게 다뤘다.

5.4가 되풀이 불러 나오는 비밀은 ‘사회변혁적 자아’를 매개로 개인과 사회가 융합

되는 변증법적 결합을 사회변혁이라는 실천과정에서 성취한 주체의 경험, 특히 공화의 확충적 실질화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운동에 있지 싶다.(120쪽)

위 인용문에서 저자가 염두하는 ‘민’은 학생 주체이다. 그러나 1949년 이후 신민주주의사회 시기에 ‘인민’이란 명명하에 계급연합이 탄생한 역사의 의의를 강조하기 위해 비교 대상으로 1919년을 소환할 때, 저자는 “5·4기에는 운동 차원에서 구현되고 지식청년이 주체가 되어 ‘민의 발견’에 머물렀다.”(236쪽)라고 운동의 한계를 언급한다. 이 서술에서 “지식청년”인 학생은 ‘민’ 그 자체라기보다 ‘민’을 발견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실패한 혁명”으로 텐안먼운동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되짚으면서 5·4기를 재차 소환할 때는, “오늘날 중국 지식인이나 청년·학생이 (5·4운동기에 성취감을 추동력으로 하여 자발적 조직을 통해 민중과 결합하던 양상과 달리) 민중의 자생적 항의운동과 결합하는 일은 쉽지 않다.”(328쪽)라는 서술이 등장한다. 이때의 학생 역시 ‘민’ 그 자체라기보다 ‘민’과 결합하는 주체로 위치한다. 학생·지식인은 ‘민’에 속하는가 아닌가?⁴ 독자로서 혼란스러운 대목이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나 전 세계 변혁운동에서 발생한 지식인과 민중의 첨예한 긴장을 돌이켜볼 때 쉽게 무시할 사안은 아니며, 이 긴장을 직시해야 (이 책에서 지향할 가치로 전제된) ‘민주’, ‘공화’, ‘자치’, ‘참여’ 등의 기표를 새롭게 쟁점화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5·4기 학생들이 새로운 사회질서를 모색하는 데 계기를 마련해 준 화두로 저자가 주목한 “‘평민’의 발견”을 좀 더 집요하게 파고들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저자에 따르면, 당시 학생들은 “청말 자강운동의 이론적 근거였던 사회적 진화론에서 벗어나 상호부조론적 아나키즘의 틀 안에서 강권(強權)에 맞서 공리(公理)를 옹호할 논리적 근거”(79쪽)로서 ‘평민’을 발견했다. 신문화운동을 통해 전통적인 관료계급으로 충원되어 온 자신의 윤리적 갱신을 촉구하는 한편, 이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을 일하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지 못한—다수 ‘평민’에게 찾고자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평

⁴ 관련해서 두아라(2004)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양 열강의 침입과 내부적 혼란 속에서 중국 민족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식인’과 ‘민’이 근대국가의 형성과 밀접히 관련된 범주로서 나란히 급부상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자를 분리해서 관계를 탐색한다.

‘민’ 논의의 진전이 “지식인으로서의 공적인 사명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80 쪽)를 터주었다는 평가와 실제 학생들과 ‘평민’으로 호명된 사람들과의 마주침이 순탄치 않았다는 기록 사이의 마찰에 주목하고 싶다. 평민교육강연단의 실제 활동은 어째서 일반 주민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았을까? ‘민중 속으로’ 향한 청년 학생들의 운동이 갖는 한계가 단순히 경험과 인프라의 부족이었을까? 필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저자가 이 책에서 호명한 ‘민’에 비해 20세기 초 중국의 학생과 지식인이 발견한 ‘민’이 훨씬 더 야누스적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은 때로 숭고하고, 때로 두려운 존재였다.

III. ‘민’과의 마주침

‘민’과의 마주침을 쟁점화하기 위해 필자의 줄거에 등장한 일화를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2006년 가을 하얼빈에서 만난 리신(가명)은 50대 초반의 국영기업 실직 노동자로, 부인과 함께 길거리 시장에서 만두를 팔았다. 동네 식당에서 술 한잔하던 중 리신은 자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놈의 나라는 우리 세대가 그저 빨리 사라지기만을 원해. 우리 나라 발전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 종자가 되어 버렸지.” 하지만 2007년 4월 마주친 그는 굉장히 의기양양해 보였다. 리신은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에 임명장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의 말을 빌리자면 “국가 부문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었다. 실직 노동자 일부를 정부 말단 직책에 재고용하는 ‘공익성강위(公益性崗位)’ 제도 덕택에 리신은 지역의 환경보호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이 정책은 왜 우리 사회주의 국가가 니네 자본주의 국가랑 다른가를 보여주는 거야. 이걸 국가가 우리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지. 국가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고, 이 나라에 대한 우리 노동자의 헌신을 여전히 존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라구.” 그날 오후 가도판사처에서 열린 정기 회의에서 나는 건너편에 리신과 임명장을 받은 다른 열 명의 전직 노동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가도 주임은 이들에게 일장 연설을 했다. “오늘 새로 임명된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대부분이 면직(下崗) 노동자 출신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점 또한 알고 있어요. 이 직위를

유지하고 싶으면 소질(素質)을 향상해야 합니다. 국가가 더는 공익성장위를 제공할 순 없어요. 더는 정부에 의존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쓰지 않으면 우린 여러분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머리 좀 쓰세요!” 회의가 끝난 뒤 리신은 자조적인 냉소를 섞어 내게 말했다. “우리 노동자들은 진짜 쓸모없는 인간들이야. 조국을 위해선 다 일찍 죽어야 해…”

리신의 일화는 포스트 마오 시대의 중국에서 ‘계급으로서의 인민(the people as a class)’ 담론이 ‘국민/공민으로서의 인민(the people as a nation)’ 담론에 의해 잠식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전자는 노동자를 사회주의 중국의 진정한 주인으로 찬양하지만, 후자에서 노동자는 굴기(屈起)하는 조국의 어두운 잔상으로 남았다. 리신의 발언에서 보듯, 노동자들의 의식세계에서 자부심과 명예의 원천으로서의 인민에 대한 복고적 향수는 “단순하고 무식한” 인민에 대한 자기 회의와 공존하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조국 건설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우리 노동자”들이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자기비하와 공존했다.

이러한 긴장은 사실 ‘민(民)’에 대한 신중국 성립 이전의 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⁵ 20세기 초반 지식인들의 논의에서 급부상한 ‘민’은 한편으로는 혈벗고 굶주린 군체(群體)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중국을 구해 낼 사명을 부여받은 ‘중국인’으로 등장했다. 량치차오와 같은 초기의 일본 유학파들, 루쉰을 비롯한 신문화운동 시기의 지식인들, 천두슈, 리다자오와 같은 초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논의에서 국민, 평민, 서민, 인민 등 여러 이름이 출몰하는 데서 보듯, ‘민’과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그럼에도 청말 민국시대 지식인들의 논의에 공통점이 있다면 ‘민’에 대한 희망과 불신이 동시에 공존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중국을 구원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만한 신뢰할 만한 집단인가”란 질문들은 정치적 스펙트럼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사회에 만연했다.⁶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고안된 ‘국민성’ 논의가 지배와 종속의 원인을

⁵ 현대중국을 연구하는 인류학자인 필자가 근대 사료를 살피는 작업은 초보적 수준에 머물렀음을 미리 짚고 가도록 하자.

⁶ 관련한 논의로 陳永森(2003); Anagnost(1997); Fogel and Zarrow(1997) 등 참조.

찾고자 분투했던 피식민 지식인들에 전유되었다는 주장(Mitchell, 2002: 17)은 ‘중국인의 노예성’에 관한 당시 지식인 집단의 신랄한 비평에서도 그 맥락을 찾을 수 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자. 저자는 중국공산당 초기 지도자인 리다자오가 러시아의 계급혁명을 긍정했음을 (그러나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는 긍정과 우려의 평가가 대체로 뒤섞였음을) 보여 주기 위해 그의 글 〈서민의 승리〉를 잠깐 언급한다(57쪽). 하지만 노동자가 자본의 통치를 불식시켜야 함을 주장한 바로 그 글에서, 리다자오가 ‘중국인’과 ‘서민’을 혼용하면서 민의 ‘거지근성’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중국인들은 강도라기보다는 거지의 성격을 지녔다. 스스로 일하지 않고 어떻게 남의 밥을 뺏어 먹을까, 남의 밥을 빌어먹을까 열중한다. 세계에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 건설되고 다 함께 일해서 다 함께 먹는 세상이 왔을 때 이렇게 빌어먹기 좋아하는 민족이 설 자리가 있겠는가? 우리가 세계상의 서민이 되려면 먼저 세계상의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李大鈞, 1984). 리다자오를 비롯한 초기의 사회주의자들은 관료, 자본가, 지식인과 대비되는 기층민중에 대한 표상으로서 평민을 옹호하고 때로 이들의 “단순”하고 “정직”함을 찬양했으나, 이 평민이 중국인 혹은 중화민족의 자격을 갖추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지식인이 당시 평민으로 호명된 사람들에 대해 품은 양가감정이 이 책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저자가 ‘민’이라는 우산 아래 각계 각층을 포괄하면서 내부의 마찰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탓도 있지만, 동시에 중국현대사에서 근대극복의 계기로 주목한 (반)식민성과 같은 비중으로 봉건성의 문제를 응시하지 않은 탓은 아닌지 궁금하다. 다른 서평에서 유용태가 지적한 대로, “5.4세대가 비판한 ‘구문화’는 실제로 상당 부분 극복되어야 할 ‘봉건성’(개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각종의 인신적 속박)으로 간주”되었으며, “1980년대 초 관방에 의해 인민의 생활문화상의 문제로 새삼 제기되어 시장경제 도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유용태, 2021: 426). 20세기 초반 학생과 지식인이 (반)봉건과 대면했던 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은, 당시 이들이 우려와 회의 속에 제기했던 ‘국민성’에 관한 논쟁이 개혁개방 이후 공공 영역에서 ‘소질(素質)’에 관한 계도적 수사로 재점화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자기계발과 능력주의,

각자도생의 신자유주의적 에토스가 사회주의 중국에서 더욱 빠르게 확산하는 역설을 현재 우리가 목격 중이기 때문이다.

사실 저자는 책의 곳곳에서 봉건성에 관한 논의를 심화할 수 있는 해석을 보여 줬다. 5·4기에 유행한 송양(崇洋) 풍조를 “중국 지식청년의 자기 문화에 대한 ‘자대(自大)’와 ‘자비(自卑)’라는 모순된 이중심리의 소산”(61쪽)으로 보거나, 문화대혁명 종결 후 서구와 중국 사이 발전의 낙차를 확인한 지식인들 사이에 팽배했던 “‘구적(球籍) 박탈’의 위기감”(291쪽)에 주목하면서 당시의 문화담론을 소상히 살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서구와의 대비 속에서 중국의 운명을 논할 때 (농민에 대한 뿌리 깊은 무시에서 보듯) 민의 “봉건성”과 “후진성”, “낮은 소질”이 격차의 원인으로 빈번히 언급되었다는 사실이다(Cohen, 1993: 151-170).

텐안먼이라는 상징성이 장소의 스케일을 구속하면서, 세 사건을 통해 ‘100년의 변혁’을 돌아보는 작업, 더구나 이 100년을 ‘민’의 곤경과 역동을 통해 재구성하는 작업에서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이 별반 등장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저자는 1949년을 다룬 2부에서 농촌의 토지개혁을 다루긴 했다. 하지만 노동자·농민에 국한되지 않는 초기의 ‘계급연합’, 다시 말해 소부르주아지, 민족부르주아지의 역할을 허용했던 초기 신민주주의 실험의 의의를 민의 자치와 결집을 보여 주는 핵심으로 파악하다 보니 당과 인민의 협력을 통한 사회주의 도시 건설 과정에 좀 더 비중이 실렸다.⁷ 공화국 초기의 ‘인민민주전정’과 신민주주의 실험에 관한 서술에서 새로 배운 바가 많았으나, 제도화 과정에 대한 소개만으로는 5·4기 서술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민’에 대한 양가적 태도가 신중국 성립 이후 ‘인민’ 주체의 등장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소되었는가에 대해 충분히 답을 찾기 어려웠다. 익히 알려져 있듯, 마오쩌둥은 민의 ‘낙후성’에 대한 지식인들의 회의를 오히려 부단한 혁명의 잠재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빈번

⁷ 저자는 도시를 재조직하는 과정에서 신설된 가도판사처와 가도거민위원회에서 ‘적극분자’로서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점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거민위원회가 단웨이(單位) 외부에 존재하는 주민조직이기에 이런 경향이 등장했다는 점을 부연하고 있는데, 필자는 하얼빈에서 조사 당시 바로 이 맥락에서 거민위원회가 갖는 여성성을 비판적으로 해석했다. 단웨이와 거민위원회(이후에는 사구)의 관계를 “주민의 삶 전반을 책임졌던 가부장”과 “단순한 조력자로서의 아내”에 비유하는 노동자들의 서사는 사회주의 도시의 재조직화가 젠더의 위계를 따라 작동한 측면에 관한 면밀한 고찰을 요구한다. 조문영(2012: 441-482) 참조.

히 해석했다. 국가 통치에 있어 교육받은 엘리트의 역할을 강조했던 소비에트식 사회주의와 달리, 마오식 사회주의는 혁명 투쟁과 경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세력으로서 인민의 의지와 잠재력을 부추겼으며, 발전의 객관적 힘을 강조했던 정통 맑시즘과 달리 인민 대중의 의식과 도덕성, 행동에서 역사의 결정 요인을 찾고자 했다(마이스너, 2004). 1919년과 1949년 사이 ‘민’을 규정하는 방식과 태도에 생긴 변화의 이음새를 농촌에서 찾으려면, 이 책에서 다룬 세 사건 외에 1930~1940년대 ‘엔안’이라는 또 하나의 사건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IV. ‘민(民)’이라는 판도라의 상자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는 책을 일종의 ‘배치물(asssemblage)’로 보면서,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묻지 말고 책이 무엇과 더불어 기능하는지, 무엇과 연결되고 접속되었을 때 강렬함을 내뿜는지 볼 것을 제안했다. “하나의 책은 바깥을 통해서만, 바깥에서만 존재한다”(들뢰즈·가타리, 2001[1980]: 14). 오랜 고민과 사유가 농축된 저작에 자잘한 토를 단 것은, 이 책이 바깥의 난장(亂場)을 향해 열려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영토성에 속박되지 않은 자신의 이력으로 보든, ‘100년의 변혁’을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와 접근 방식의 다채로움으로 보든, 저자는 동료 연구자와 후학이 중국과 그 너머에서 다양한 주제를 심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었다.

특히 필자는 이 책이 ‘민(民)’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다는 점에 주목했다. 1919, 1949, 1989년의 세 사건을 민의 자치와 결집이라는 주제 아래 재구성하면서, 저자는 서구를 민주의 표준으로 삼기를 거부하고, 서구가 공화, 시민 사회, 자치, 참여, 자발성과 같은 어휘들을 독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렇다고 ‘중국 특색’이라는 편리한 라벨을 붙여 당-국가가 이 어휘들을 선취하고, 문제를 봉합하고 지배의 합법성을 구축하는 도구로 남용하는 데도 반대했다. 양자와 거리를 두면서도 민주라는 화두를 끈질기게 붙들고, 5·4기 사회변혁적 자아의 출현을 복기하면서 개인의 수양이 사회적 영성의 집단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로를 모색하는 저자의 노력은 현재 중국은 물론 한국과 전 세계를 휩

쓰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적 문제의식이 ‘민(民)’과 ‘민주’에 대해 선형적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다른 출로에 대한 상상을 닫아버린 것은 아닌지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필자가 앞서 “저자의 학문 이력에서 돋보이는 실천적 접근이 (이 책의 중심 주제인) ‘민(民)’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민’의 통치성, ‘민’에 대한 양가적 태도, 학생·지식인과 ‘민’의 긴장에 주목한 이유다. 민의 자치와 결집이라는 이 책의 주선율은 민의 ‘참여’와 ‘자발성’을 장려할 만한 것으로 가정하고, 민에게 ‘저항하는 주체’와 ‘협력하는 주체’ 사이의 양자택일만 허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이 지배자에 의해서든 지식인에 의해서든 ‘민’으로 호명되고, 국가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인정의 자리를 부여받는 이 시스템의 바깥은 과연 없는 걸까?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민주와 자유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시진핑 체제하에서 소수민족의 몸과 언어가 결박당하는 현실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면서, 필자는 “민의 결집과 자치”의 경험이 학습되고 점증되어온 만큼 이들이 운동과 제도 차원에서 어떤 변혁을 일으킬지”(373쪽) 계속 주목하자는 저자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진 못했다. 오히려 전체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매우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제도에 불과한 국가에 — 저항이든 협력이든 —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스콧, 2019[2017] 참조)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정돈되지 못한 물음들이 솟구쳤다. 여성이든 이주민이든 소수민족이든, 누군가는 계속 노예가 되어야만 존속 가능한 시스템이 국가라면 말이다.

이런 점에서 (외부로부터) 체제 이데올로기에 세뇌되고 순종적이라고 곤잘 비난 받는 평범한 중국 인민들이 어찌면 가장 영민한 저항자들일지도 모르겠다. “중국에서 나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좋은 일은 무조건 당이 해야 한다.”라며 불만을 내뿜지만, 공식 석상에선 당이 정한 대로 행동하고 자신만의 자율 공간을 따로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나의 사회복지사 친구처럼 말이다. 하지만 거대한 불평등의 시대에 각자도생의 끝이 어디일지 그려보는 순간 암담함이 밀려든다. ‘민’이라는 화두, 저자의 오랜 사유와 쉽게 결별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고든, 콜린·그레엄 버첼·피터 밀러 편. 이승철 외 역. 2014[1991].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난장.
- 두아라, 프라센지트 저. 손승희·문명기 역. 2004[1995].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근대 중국의 새로운 해석』. 삼인.
- 들뢰즈, 질·펠릭스 가타리 저. 김재인 역. 2001[1980]. 『천 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 새물결.
- 마이스너, 모리스. 2004.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이산.
- 백영서. 2013.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창비.
- 스콧, 제임스 C. 저. 전경훈 역. 2019[2017]. 『농경의 배신: 길들이기, 정착생활, 국가의 기원에 대한 대항서사』. 책과함께.
- 유용태. 2021. “민을 주체로 한 독특한 서사방식의 중국 현대사: 백영서, 『중국 현대사를 만든 세 가지 사건: 1919, 1949, 1989』.” 『역사학보』 249호, 421-429.
- 이남주 편. 2009. 『이중과제론: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 창비.
- 조문영. 2012. “‘결함 있는’ 인민: 중국 동북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기층간부들의 ‘사구자치’(社區自治)가 갖는 딜레마.” 『현대중국연구』 13권 1호, 441-482.
- 李大釗. 1984. “庶民의勝利.” 『李大釗文集(上)』. 人民出版社.
- 陳永森. 2003. 『告別臣民的常識: 清末民初的公民意識與公民行爲』. 南開大學出版社.
- Anagnost, Ann. 1997. *National Past-Times: Narrative, Representation, and Power in Modern Chin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Cho, Mun Young. 2013. *The Specter of “the People”: Urban Poverty in Northeast Chin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Cohen, Myron. 1993. “Cultural and Political Inventions in Mondern China: The Case of the Chinese ‘Peasant’.” *Daedalus* 122(2), 151-170.
- Fogel, Joshua A. and Peter Zarrow, eds. 1997. *Imagining the People: Chinese Intellectuals and the Concept of Citizenship, 1890-1920*. Armonk, N.Y.: M. E. Sharpe.
- Mitchell, Timothy. 2002. *Rule of Experts: Egypt, Techno-Politics, Modern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se, Nikolas. 1990. *Governing the Soul: The Shaping of the Private Self*. London: Routledge.

